

# EU Brief

| EU 동향 |

- 한-EU FTA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Preparation is needed to reap benefits of the Korea-EU FTA
- 동유럽 시장경제 20년 평가  
Analysis on 20 years of market economy in Eastern Europe
-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독일의 리더십이 필요  
German leadership is key in overcoming the fiscal debt crisis
-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사전동향관찰 개시  
EU's initiation of prior surveillance mechanism for Korean car imports
- 위기에 빠진 유럽 항공업계  
EU airlines in crisis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http://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 EU Focus

- 한-EU FTA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 002  
Preparation is needed to reap benefits of the Korea-EU FTA



## EU Economy

- 동유럽 시장경제 20년 평가 ..... 004  
Analysis on 20 years of market economy in Eastern Europe



## EU Politics

-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독일의 리더십이 필요 ..... 008  
German leadership is key in overcoming the fiscal debt crisis



## Trade & Investment

-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사전동향관찰 개시 ..... 013  
EU's initiation of prior surveillance mechanism for Korean car imports



## Industry Trends

- 위기에 빠진 유럽 항공업계 ..... 017  
EU airlines in crisis



## EU Law

- 가즈프롬에 대한 반독점 제재의 법률적 내용과 정치-경제적 함의 ..... 022  
EU's antitrust inquiry on Gazprom



## Social Issues

- EU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단상(斷想) : '사회평화'를 위한 유럽통합은 가능한가? ..... 026  
Some thoughts on the Nobel Peace Prize to the EU



## Report Review

- 유로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로화의 역할 ..... 030  
Intra-Euro rebalancing is inevitable, but insufficient



## EU Centre news

- 제15회 브뤼셀 포럼 ..... 032  
The 15<sup>th</sup> Brussel Forum
- 제43회 EU 특별강연 ..... 033  
The 43<sup>rd</sup> EU Special Lecture
- 제44회 EU 특별강연 ..... 034  
The 44<sup>th</sup> EU Special Lecture
- 제45회 EU 특별강연 ..... 035  
The 45<sup>th</sup> EU Special Lecture
- 제16회 EU Core-Circle Society 세미나 ..... 035  
The 16<sup>th</sup> EU Core-Circle Society Seminar
- 2012 EU 아카데미 가을학기 개강 ..... 036  
2012 EU Academy Fall Semester



# 한-EU FTA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 Preparation is needed to reap benefits of the Korea-EU FTA

As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11, Korea gained an access to the largest market in the world. With the adoption of the FTA, Korea and the EU will be able to cooperate with an aim of accelerating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It is now up to Korean companies to make effective use of the FTA and this will provide momentum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In order to achieve this, Korea and Korean businesses must take the following actions until 2015.

First of all, Korea has to change its thinking about the Korea-EU FTA.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EU FTA are different to those of Korea's previous FTAs. The agreement with the EU is special as the EU is the largest single market an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ners in the world. Therefore we need to move away from our previous economic logic of achieving economic growth purely through export expansion to utilising the FTA to become a key strategic partner. We should cooperate while competing at the same time.

Secondly, Korea has to continue studying about the EU. The EU is a "school" as well as a market and Korean companies should continuously learn about the EU and its characteristics. They should actively study diverse areas of the EU such as its history, culture, politics and society. Also, they should invest in training EU specialists.

Thirdly, Korea needs to recognise the double-sidedness of the EU economy. The EU is a huge single market and at the same time it is composed of 27 members. This means that commonness and diversity

coexist in the EU market. Also, economically strong countries such as Germany, Poland and Sweden and fiscally weak countries such as Portugal, Ireland, Greece and Spain live together in the economic union. Therefore Korean companies need to carefully design their entry strategies in order to deal with the market's double-sidedness.

Fourthly, Korea should recognise that the EU can act as a new growth engine. Companies in the EU continue to grow in the global market based on their diverse competitiveness. Korea should learn from them how to construct an ecosystem in which large corporation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exist. Also, Korean entrepreneurs can spread their wing in the EU market. In other words, Korea may be able to find solutions in the EU for its societal problems such as private sector inequality and youth unemployment.

Lastly, we should remember that the Korean market is a place to strengthen relations with the EU. European firms which wish to enjoy the opportunities in the rapidly expanding Asian market will enter the Korean market and use it as a stepping stone. Korea should not just stare at the European firms entering the market but rather it should take an active role. By doing this, Korea will be able to vitalise its domestic market and find ways to enter the EU at the same time.

For Korean companies, and for Korea to become the centre of the global economy, they should utilise the advantages they enjoy from the FTA and take an active role in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유럽시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과 유럽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구를 마련했다. 이에 한국기업들은 한-EU FTA를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모멘텀으로 생각하고 그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한-EU FTA에 대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한-EU FTA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된 FTA들과 그 성격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대 규모 경제권과의 FTA, 즉 크고 강한 파트너와의 협력관계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FTA를 통해서 수출을 늘려 경제규모를 확대한다는 경제논리만으 한-EU FTA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협력을 통한 경쟁'을 창출하는 FTA로 승화시켜야 한다.

둘째, EU에 대해 끊임없이 학습해야 한다. EU는 한국기업에게 커다란 시장이자 신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학교다. 시장인 동시에 학교로서의 EU를 한국기업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에 대한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EU의 역사, 문화, 정치, 사회 등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EU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셋째, EU의 양면성을 활용해야 한다. EU는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커다란 시장이면서 27개의 다양한 국가로 구성된 시장이기도 한다. 미국이나 중국 시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일체성과 다양성이 더 많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독일, 폴란드, 스웨덴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시장들과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와 같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장

들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이러한 양면성에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EU는 새로운 성장의 엔진임을 인식해야 한다. EU 내의 기업들은 다양한 경쟁력의 원천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EU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고,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EU 시장에서 큰 꿈을 펼칠 수도 있다. 즉,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상생 및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을 EU와의 협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 시장은 EU와의 발전적 협력의 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시아 시장이 빠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발판으로 이와 같은 기회를 만끽하려고 EU 기업들이 우리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몰려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EU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달려오는 것을 지켜보지만 말고 두 팔 벌려 껴안아야 한다. 한국 시장은 EU 기업들과 함께 내수시장 활성화는 물론 EU 및 다른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도화선과 같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이, 그리고 한국이 글로벌 중심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한-EU FTA를 통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EU 시장을 한국기업의 새로운 도약의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 ★

박영렬 연세-SERI EU Centre 소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동유럽 시장경제 20년 평가

## Analysis on 20 years of market economy in Eastern Europe

It has already been more than 20 years since the economic transition began in Eastern Europe. While speeding up the pace of market liberalisation and the EU integration process, Eastern Europe has achieved a stable economic growth and its importance as an emerging market has risen. However, as the overall institutional reform has been rather poor, there still exists large underground economy and strong bureaucracy. They are often pointed out as major factors which are hampering the speed of the transition process. Also, there is a worry that Eastern Europe's growth will be unsustainable as the growth rate of labour, capital and productivity are expected to be low in a medium to long term. On top of this, Eastern Europe's high level of dependence in terms of trade and financial sector on Western Europe means that it is vulnerable to external shocks. The future of Eastern Europe depends on whether it succeeds in establishing a system of market economy through institutional reform and in enhancing its economic strength through raising productivity. Eastern Europe is now in a situation where it ha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U integration process while overcoming the structural vulnerabilities.

### 동유럽 경제의 20년을 평가해볼 시점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역사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동유럽 경제는 시장개혁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sup>1</sup>하면서 신흥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또한 10개국이 EU에 가입하는 등 EU 통합의 성과도 보였다. 성장하고 있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한 가운데 EU 시장으로 진출하는 투자 관문으로서의 역할로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하지만 동유럽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유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에 동유럽 시장경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 전반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재평가해보고자 한다.

### 동유럽 시장경제의 명(明)과 암(暗)

동유럽 시장경제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개혁, 거시안정, 통합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 첫째, 개혁 측면은 체제전환을 통해 계획경제의 잔재를 극복하는 동시에 시장경제를 제도적으로 얼마나 정착시켰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시장개혁의 구성요소인 자유화, 안정화, 사유화, 제도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요소의 잔재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둘째, 거시 측면은 개혁 초기 극심한 불황

### ★ 동유럽 국가 일반 현황(2011년 기준)

	국가	화폐	인구(만 명)	1인당 GDP(달러)
EU(10)	슬로바키아	유로	544	23,384
	슬로베니아	유로	203	29,179
	에스토니아	유로	134	20,182
	폴란드	즐로티	3,828	20,137
	헝가리	포린트	998	19,647
	체코	코루나	1,052	25,934
	루마니아	레우	2,149	12,358
	불가리아	레바	749	13,563
	라트비아	라트	225	15,448
	리투아니아	리타스	332	18,770
非 EU(6)	알바니아	레크	317	7,780
	보스니아	마르카	384	8,174
	크로아티아	쿠나	440	18,338
	세르비아	디나르	729	10,661
	마케도니아	디나르	204	10,370
	몬테네그로	유로	62	11,228
러시아CIS(12)	러시아	루블	14,037	16,687
	아르메니아	드람	309	5,395
	아제르바이잔	마나트	919	10,217
	벨라루스	루블	960	14,948
	조지아	라리	435	5,430
	카자흐스탄	팅게	1,603	13,060
	키르기스스탄	숨	533	2,381
	몰도바	레우	356	3,383
	타지키스탄	소모니	688	2,040
	우크라이나	흐리부냐	4,545	7,199
	우즈베키스탄	숨	2,744	3,294
	투르크메니스탄	마나트	504	7,519

주: 시장개혁이 완료된 체코를 제외한 27개국을 이행경제 체제로 분류하는 경우 많음  
자료: IMF, Global Insight

<sup>1</sup> 1994~2011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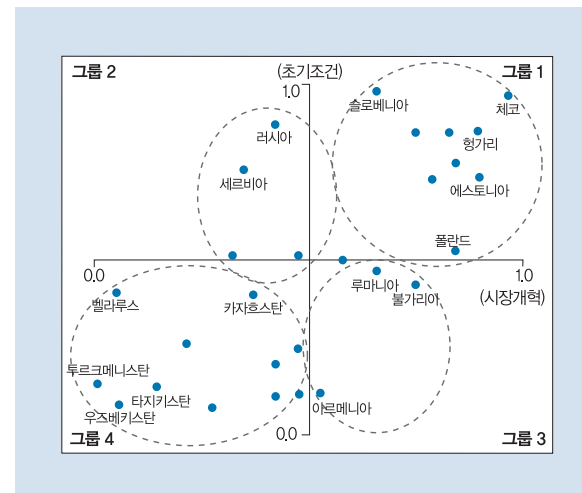
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거시적인 안정과 성장을 달성했는지 분석하고 향후에도 지속성장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시장개혁 기간 동안의 경제 펀더멘털을 분석하고 향후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산업 공동화, 성장동력 부재 등의 이슈를 점검해본다. 셋째, 통합 측면은 EU 가입을 통한 통합 강화,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성과를 분석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아울러 EU 통합 강화로 얻은 경제적 이득을 분석하고, 금융과 실물 부문에 있어 서유럽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점검한다.

### ① 개혁 측면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다. 시장개혁의 기본 구성요소로는 자유화, 안정화, 사유화, 제도화를 꼽을 수 있다. 이 중 자유화(가격과 무역의 자유화, 소규모 사유화)와 안정화(물가와 재정 등 거시경제 기초 안정화)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개혁 초기 즉시 이행될 수 있는 '1차 개혁'으로 분류된다. 사유화(대규모 사유화)와 제도화(공정경쟁 정책,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은행 및 금융기관 개혁 등)는 절차가 복잡하여 개혁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차 개혁'으로 구분된다. EBRD 지표에 따르면 1차 개혁은 구 사회주의권 국가 27개국 중 25개국에서 착수된 반면, 2차 개혁은 불과 10개국에서만 시작되었다.

특히, 초기 조건이 유리했던 중동부 유럽과 그렇지 못한 남동부 유럽 및 CIS 국가들의 개혁 이행 성과가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초기 조건과 개혁 속도에 따라 그룹 별로 나눠보면, 그룹 1은 초기 조건이 좋고 시장개혁도 빠른 국가로 체코,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마케도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10개국)가 포함된다. 그룹 2는 상대적으로 초기 조건이 좋았으나, 시장개혁이 느린 국가로 몬테네그로, 러시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4개국)가 이에 속한다. 그룹 3은 초기 조건이 불리했으나, 시장개혁은 빠른 국가로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3개국)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그룹 4는 초기 조건이 불리하고

### ★ 초기 조건과 시장개혁에 따른 동유럽 분류



주: x축은 개혁 속도, y축은 초기 조건(환경, 경제, 시장조건)을 표준화한 값  
자료: EBRD, Eurostat, Global Insight

시장개혁도 느린 국가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스니아,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11개국)이 속한다.

무엇보다도 개혁이 부진한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말기의 잔재인 부패와 지하경제가 만연해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들의 재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체제전환 국가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관료들의 부패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혁이 많이 진행된 그룹 1은 부패의 감소폭이 가장 큰 반면, 그룹 4는 가장 작았다. 하지만 다른 경제권과 비교했을 때 그룹 1도 평균 이하를 기록해 아직까지 사회주의의 폐해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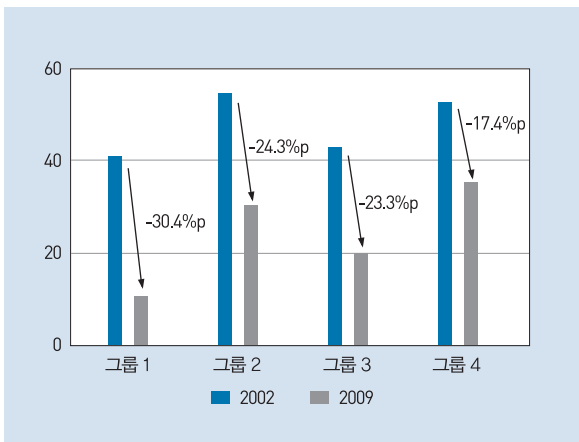
### ② 거시 측면

시장개혁 초기(1990~1994년)에는 27개국 모두 연평균 성장률이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경기침체가 발생했다. 하지만 1995년 이후에는 경제가

<sup>2</sup> 지하경제 규모(GDP 대비): 그룹 1(31.3%) > 그리스(30.8%) > 이탈리아(29.8%) > 미국(9.3%)



★ 관료들의 부패 정도 비교



주: 세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  
자료: World Bank, WDI.

차츰 안정되면서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다. 1995년 이후 동유럽 27개국의 성장률 평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꾸준히 상승하여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8.7%를 기록하기도 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시장개혁이 빠른 국가군 성장률의 변이계수<sup>3</sup>가 시장개혁이 느린 국가군의 변이계수보다 현저히 낮아 빠른 개혁이 경제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룹 1과 3의 성장률 변이계수는 8.5이었던 데 반해, 그룹 2와 4의 변이계수는 16.6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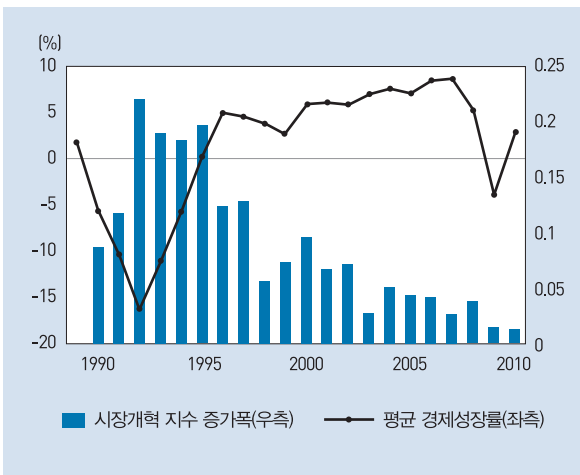
물가 측면에서도 역시 빠른 시장개혁을 실시한 국가들이 안정화에 먼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0년간 그룹 1과 3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5.1%였으나, 그룹 2와 4의 물가상승률은 12.5%에 달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는 대부분 국가에서 물가상승<sup>4</sup>이 안정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자본 투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성 향상이 정체되

<sup>3</sup> 변이계수: 표준편차를 평균의 절대값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되며, 변이계수가 크면 클수록 변동성이 큰 것으로 판단. 즉, 성장률의 변이계수가 크다는 것은 해당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의미

<sup>4</sup> 1994년 27개국의 물가상승률은 평균 1338%에 달했으며, 1989~1995년까지 매년 100%를 상회

★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개혁과 성장률 추이



자료: EBRD: 삼성경제연구소

어 있어 향후에는 동유럽 경제의 성장력이 둔화될 소지가 크다. 노동 투입 면에서는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고급 인력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sup>5</sup>, 자본 투입 면에서는 초기 체제전환 특수가 소멸되어 FDI 유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sup>6</sup> 더구나 R&D 비중 감소, 임금 상승 등 생산성 향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통합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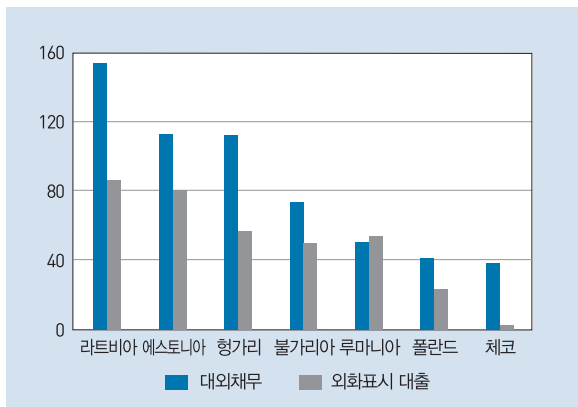
동유럽은 시장개혁 이후 총 10개국이 EU 회원국이 되고, 이 중 3개국은 유로존에 가입하는 등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27개국의 1인당 GDP 평균은 시장개혁 초기 998달러(명목)까지 하락했으나, 2008년에는 9.2배 증가한 9,214달러를 기록했다. 연평균 14.9%씩 증가한 셈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빠른 시장개혁을 통해 EU에 가입한 국가들은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생전조약에 의거), 중산층 확대 등을 경험했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 서유럽에 과도하게 의존함

<sup>5</sup> 인구 변화(1990~2010년): 그룹 1(-3.8%), 그룹 2(-4.0%), 그룹 3(-11.3%), 그룹 4(11.1%), 브라질(30.3%), 중국(17.0%)

<sup>6</sup> FDI 유입 증가율: 3.2%(1995~2005년), -3.3%(2005~2010년)

★ 동유럽 금융의 해외 의존도



자료: IMF,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

으로써 외부 충격에 취약한 약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할 경우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든 한계를 이미 2009년 초에 경험했다. 외부충격에 취약한 금융구조는 2009년 위기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는데, 총 대외채무 비중(GDP 대비)은 개혁이 빨리 진행된 국가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특히 고정환율제 하에서 환율 상승 압력을 받는 국가들은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질 위험도 있다.

실물 부문에서도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외부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로의 통합이 빠르게 진행된 국가들의 수출비중이 높았다.<sup>8</sup> 더구나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이 심해 외부 충격에 경기가 급락

<sup>7</sup> GDP 대비 대외채무(2010년 기준): 그룹 1(98.1%), 그룹 2(74.7%), 그룹 3(80.2%), 그룹 4(45.7%), 신흥국 전체 평균(24.7%)

<sup>8</sup> GDP 대비 수출 비중 (2010년 기준): 그룹 1(50.1%), 그룹 2(25.6%), 그룹 3(28.6%), 그룹 4(34.1%), 신흥국 전체 평균(27.2%)

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러시아 등에 대한 의존이 심해 해당국 경기에 전염효과가 큰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평가 및 시사점

시장개혁과 EU 통합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한 것은 분명 동유럽 시장경제 20년의 성과다. 하지만 제도개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진행됨으로써 지하경제, 관료주의 등 시장경제체제가 완전히 확립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더구나 노동과 자본 투입, 생산성 향상 등이 중장기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금융과 수출 부문에서 과도하게 서유럽 경제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결국, 제도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시장경제 체질 개선 등 중장기적 차원의 도전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동유럽 경제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국가들이 시장개혁을 이행했던 동유럽 시장경제 20년, 경제 고유의 취약성을 극복하면서 EU 통합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쉽지 않은 도전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다. ★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독일의 리더십이 필요

## German leadership is key in overcoming the fiscal debt crisis

Germany will continue to push forward the framework of supporting weak eurozone members that is temporary and limited rather than permanent and unlimited. Also, Germany will make sure that the framework does not violate the Maastricht Treaty and the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ermany will continue to respect the decision made by the Consitutional Court. However, along with the eurozone members in trouble, Germany's important partner countries such as the US are demanding it to take the role of a problem solver. In this situation, Germany is likely to carry out the actions which are agreed by all stakeholders. Therefore, for Germany to become a problem solver, it requires eurozone's weak countries to adopt measures to reduce their fiscal deficits and the German people to agree on the bailout package. Also, fiscal integration which will be a difficult and long process will be pushed ahead at the same time.

### 독일은 유로존 경제의 버팀목

독일은 유로존 경제의 27%(EU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대국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 경제의 성장엔진이자 유로화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2011년 기준으로 독일은 유로존 수출의 31%, 수입의 2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로존 전체 경상수지의 73.8%를 차지할 정도로 대외경쟁력이 강하다.

독일은 프랑스와 더불어 유로존 위기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은 경제규모에 걸맞게 유럽중앙은행(ECB)의 지분 18.9%를 차지하는 최대 출자국이기도 하다. 또한 독일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4,4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가운데 29.1%에 대한 보증을 약속하고 있으며, 10월 8일에 공식 출범한 유럽안정화기구(ESM)의 납입자본금 중 27.1%를 담당하는 최대 재정 부담국이다.

### 유로존 위기와 독일경제

독일은 재정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가속화된 유로화 약세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누려왔다. 지난 2년간 유로화 약세로 인한 수출 증가만으로도 약 500억 유로의 수출 확대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독일 전체 GDP의 2%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재정위기로 인해 실물경제가 악화되면서 독일 수출도 주춤하는 양상이다. 2012년 1~8월 동안 독일의

### ★ 회원국별 ECB 및 ESM 자본금 현황

(단위: %)

구분	ECB	ESM
독일	18,9373	27,146
프랑스	14,2212	20,386
이탈리아	12,4966	17,914
스페인	8,3040	11,904
네덜란드	3,9882	5,717
벨기에	2,4256	3,477
그리스	1,9649	2,817
오스트리아	1,9417	2,783
포르투갈	1,7504	2,509
핀란드	1,2539	1,797
아일랜드	1,1107	1,592
슬로바키아	0,6934	0,824
슬로베니아	0,3288	0,428
룩셈부르크	0,1747	0,250
키프로스	0,1369	0,196
에스토니아	0,1790	0,186
몰타	0,0632	0,073
합계	69,9705	100,0

수출은 전년 대비 5.5% 증가했으나, 對유로존 수출 증가율은 -0.9%를 기록하였다. 지난 8개월 동안 독일의 전체 수출(7,341억 유로)에서 對유로존 수출(2,763억 유로)이 차지하는 비중은 37.6%를 기록했으나, 지난 8월에는 비중이 33.7%로 감소하였다. 對유로존 수출은 부진했지만 1~8월 중 역외 수출은 11.9% 증가하였고, 역외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도 42.8%로 상승하였다. 독

일 수출은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2위를 기록했으나, 재정위기로 고전하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수출 부진으로 인해 2010년부터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이는 강한 경쟁력을 지닌 독일경제도 남유럽 재정위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지난 7월 23일 독일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도 향후 6~12개월 이내에 Aaa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신용등급 전망 하락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국제 수익률은 10년물 기준 1.18%에서 8월 21일에 1.56%로 미미한 상승에 그쳤다. 독일의 국제금리는 영국이나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디스의 독일 신용등급 전망 하향이 결국 유로존 국가들의 부채를 상당부분 독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유로존 위기의 구원투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독일이 떠안아야 하는 우발채무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 유로존의 존립은 독일 국익과 직결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연쇄 탈퇴로 인한 유로존의 붕괴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에게도 결코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은 어느 나라보다도 유로화의 혜택을 많이 본 나라다. 유로화가 해체되는 순간 그 혜택이 소멸될 뿐 아니라 유로존 경제의 성장 저하와 금융시장의 혼란에 따른 막대한 피해까지 각오해야 한다. 한 국가라도 유로존을 탈퇴하게 될 경우 유로존 전체의 시스템 위기로 인식되어 주식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이것이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금융위기에 민감한 기업들은 금융시장 충격으로 도산하게 되어 실물경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독일도 금융시장의 혼란과 실물경제로의 위기 파급으로 인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sup>1</sup>

또한 독일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채로 인한 저금리 효과로 큰 이익을 누리고 있다. 주변국들의 국채가 재정위기로 투자 위험성이 커지면서 독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장기간 낮은 금리가 유지되었다. 지난 2년간 독일정부가 낮은 국채이자로 얻은 수익은 45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독일에게는 단기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면서도 매우 큰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다름 아닌 TARGET2<sup>2</sup> 위기다. 유로존이 해체될 경우 독일이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은 예상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현재 유로존 결제시스템상 독일이 유로존 국가들과 거래한 경상수지 흑자 가운데 상당 부분은 유로존이 붕괴되면 되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TARGET2 시스템으로 불리는 유로존 회원국들 간의 결제체제 때문이다.

유로존 국가들은 중앙은행 간 실시간 거래 청산방식인 TARGET2 시스템을 통해 매일 유로존 내의 거래를 청산한다. TARGET2를 통한 유로화 사용자 중앙은행들 간의 거래 청산 규모는 하루에 평균 35만 건, 2.4조 유로 규모에 이른다. 이 계좌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은 자국 은행과 해외 은행들 간의 상품거래, 증권거래, 부채청산 등을 매일 결산한다.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리스크 요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독일이 역내에서 지속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거두고, 이 경상수지 흑자가 각국의 중앙은행 계좌를 통해 유럽중앙은행에 통합되면서 상계되는 효과로 인해 독일중앙은행에는 막대한 채권계좌가 생성되었다. 독일의 TARGET2 흑자 규모는 지난 1년간 3,749억 유로에 달하는데, 유럽 결제체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와 맞물릴 경우 독일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sup>1</sup> 2012년 3월 말 현재 독일 은행들의 5개 재정위국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총 4,189억 달러로, 스페인 1,461억 달러, 이탈리아 1,340억 달러, 아일랜드 953억 달러, 포르투갈 302억 달러, 그리스 134억 달러다.

<sup>2</sup> Trans-European Automated Real-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 System







게 된다. 따라서 남유럽 국가들의 유로존 이탈이나 독일의 마르크화 재도입과 같은 문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독일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준비가 전제되어야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TARGET2 제도와 같이 유럽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된 상황에서는 유로화를 둘러싼 급격한 구성원의 변화가 있기 전에 제도적 개혁을 통해 유럽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채무 보증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국<sup>3</sup>들을 위한 구제금융 및 여러 금융지원 조치들로 인해 천문학적인 익스포저(exposure)<sup>4</sup>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뮌헨에 있는 Ifo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위기 해결을 위해 유로존 차원에서 조성한 전체 지원액(2조 2,730억 유로) 중 독일은 7,950억 유로(전체의 35%)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금액에는 TARGET2와 관련해 독일이 채권으로 갖고 있는 총 4,330억 유로가 포함되어 있다. 만약 재정위기국들이 국가부도를 선언할 경우 독일이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우발채무인 셈이다. 무디스는 유로존이 최악의 상황에 처할 경우 독일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유로존의 운명과 독일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대목이다.

### 독일인들의 위기대응에 대한 시각

유로존 위기가 3년째 지속되면서 외국인들에게 있어 과연 독일 시민과 유권자들은 추가 구제금융 지원과 정치통합 심화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러 기관들이 내놓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들은 대체로 유럽통합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로화와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지

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sup>5</sup> 더군다나 이러한 여론은 국내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악화될 소지도 있다. 독일인들은 위기대처 측면에서 자국의 정치인들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메르켈 총리를 위기 해결의 유일한 해결사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망과 이미 약속한 재정부담 규모, 독일의 위기 대처능력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대다수 독일인들은 그리스를 제외하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재정위기가 궁극적으로 잘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통합 심화에는 그다지 큰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3년 9월로 예정된 총선과 관련한 여론은 유로존 위기 해결에 있어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위기해결 과정에서 잠재적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재정위기국들을 지원하는 일은 논란이 따르는 작업이지만 정치적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하지만 그리스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독일로서는 아주 어려운 과제다.

외국인들은 독일인들이 유로존 회원국들에 대한 인내심을 잃게 되어 지원을 거부하고 과거 사랑했던 자국 화폐인 마르크화로 회귀함으로써 유로존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현실을 너무 단순화한 기우일 뿐이다. 독일인들은 정부의 그리스 정책을 제외하고 메르켈 정부가 추진해온 위기 대응정책을 지지해왔으며, 현재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재정긴축과 구조개혁에 이어 금융통합(은행동맹), 재정통합, 경제 및 정치통합 등을 통해 유로존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sup>5</sup> 6월 실시된 공영방송 ARD의 여론 조사에서 유로화 도입에 대해서는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9%,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7%의 비중을 차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약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일한 조사에서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비중은 23%, 그리스가 자발적으로 유로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67%를 차지했다.

### 독일 정치권의 입장

유럽재정안정기금이나 유럽안정화기구 등 유로존 붕괴를 막기 위한 모든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좌파당(The Left)을 제외하고 독일 내 모든 주요 정당들은 유로화의 안정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다만 남유럽 국가들의 지원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상이하다.

현재 독일 정치 구도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위기해결을 위한 재정위기국 지원에 여당보다 야당이 더 적극적이다. 야당 가운데에서는 녹색당이 남유럽 국가의 성장과 청년실업에 대한 지원까지 요구하는 등 지원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사민당(SPD)<sup>6</sup>도 남유럽 재정위기국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재정 지원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연립 여당의 일원인 자민당(FDP)은 남유럽 국가에 대한 지원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또 다른 연정파트너인 기사당(CSU) 내에서도 지원 반대론자가 늘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CDU)은 재정위기국들의 철저한 긴축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독일 정치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당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모든 유로화 혹은 남유럽 국가에 대한 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독일 현재는 남유럽 지원과 관련하여 이미 한 차례 중요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금까지 독일 현재는 남유럽 국가 지원 등 중요한 재정 문제의 경우 정부의 결정에 앞서 최소한 의회에서 각 정당 재정정책 담당 의원들의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해왔다. 이러한 입장에 의거하여 지난 9월 12일에 독일 현재는 구제금융 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상설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독일 현재는 독일의 분담액 보증 규모를

<sup>6</sup> 사민당은 10월 1일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메르켈 정부의 초대 재무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페어 슈타인브뤽을 총리 후보로 결정하였다.

최대 1,900억 유로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만약 독일 현재가 유럽안정화기구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면 독일의 유럽안정화기구에 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능해지고, 지난 6월 말 EU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여러 위기해법들이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남유럽 국가들은 파산위기에 처했을 것이다.

### 독일이 바라는 궁극적인 위기해법

현재 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 등 주변국들은 독일이 유로존 위기의 '해결사'로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자신의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으로 독일인들은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 강하며,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식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사결정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는 위험한 모험일 수밖에 없다. 점진적 해법 모색으로 정치적·법적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시장이 급변할 경우 유로존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독일이 너무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에 나섬으로써 초기에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리고 독일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끔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독일식 위기해법은 합의된 행동을 따르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고 공동 목표를 향해 일치된 행동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로존 위기와 관련하여 합의된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위기 상황일수록 내부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바탕으로 긴축과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로존 국가들이 행동 일치를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기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유로존 국가들의 합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소장 프레드 버그스텐(Fred Bergsten)과 같은 일부 전문

<sup>3</sup>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스

<sup>4</sup> 대출 및 투자, 파생상품에 대한 주요 은행들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한 대차대조표상의 잔고



#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사전동향관찰<sup>1</sup> 개시

## EU's initiation of prior surveillance mechanism for Korean car imports

In July, 2012, the French government requested to initiate the prior surveillance mechanism for Korean car imports in respect of the EU-Korea FTA. The French government argued that there exists un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there is enough evidence to request for the prior surveillance mechanism. But Korea argues tha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rise in Korean car imports due to the tariff liberalisation led to serious injury to European car industry. So it seems unlikely that the EU will actually carry out the prior surveillance, but at the same time Korean companies should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as the EU and France may make political moves to protect their market which is shrinking fast as a consequence of the fiscal crisis. The likelihood of adopting the safeguard measures is lower than that of prior surveillance as the EU will have to compensate for the loss that is made as a result of the safeguard measures.

### 배경

지난 7월 26일 EU 현지 언론은 프랑스가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사전 동향관찰(prior surveillance)’ 조치의 개시를 EU집행위에 요청했다고 보도하였다.<sup>2</sup> 기사에서 프랑스 산업부장관인 아르노 몬테부르(Arnaud Montebourg)는 현재의 상황이 “불공정한 경쟁”이고, 이러한 상황은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사전 동향관찰 조치를 요구할 근거가 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푸조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 발표와 함께 이루어진 자국 정부의 청정대기 차량 지원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U집행위는 8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프랑스 정부로부터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사전 동향관찰 요청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이러한 요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sup>3</sup> 한국 언론은 이러한 요구가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EU집행위가 밝힌 바

와 같이 회원국 중 하나인 프랑스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서 인용한 몽테부르장관의 표현이 정확하다면 “불공정한 경쟁”은 사전 동향관찰이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과는 법적으로 다소 거리가 있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인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와 달리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물량이 지나치게 많고,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야만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EU의 사전 동향관찰 제도와 세이프가드 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전개될 상황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 한·EU FTA의 세이프가드와 EU의 양자세이프가드 규칙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한국으로서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ASEAN, 인도에 이어 6번째로 체결한 FTA이며, 시장 규모나 양자 간 무역규모에서 볼 때 가장 큰 규모의 FTA다. 동 협정에서 세이프가드는 제3장 무역구제 편에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자세이프가드는 A절에서, 농업세이프가드는 B절에서, 다자세이프가드는 C절에서 다루고, 전반적인 제도 규정은 E절에서 다루고 있다. 양자세이프가드는 FTA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발생할 경우, 조치 발동 당시의 MFN 세율이나 관세양허 스케줄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세율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데, 관세철회

<sup>1</sup> EU의 양자세이프가드 규칙에는 감시(monitoring) 제도와 사전 동향관찰(prior surveillance)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모니터링과 사전 동향관찰 모두 관찰 또는 감시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prior surveillance을 외교통상부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사전 동향관찰”로 표현한다.

<sup>2</sup> Euro politics (2012.7.26.). France asks for surveillance measures on Korea car imports.

<sup>3</sup> European Commission Trade DG (2012.8.3.). France Requests surveillance for Korean car imports.(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825)

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리스 등 일부 국가가 유로존을 이탈하거나 대규모 재정 감축을 통한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줄 경우 전체적인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져 독일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 재정통합 논의에도 적극 나설 전망

독일은 단기적으로 유로존 위기 대응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중시하여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독일 기본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구적인 지원이 아닌 한시적인 지원, 무제한의 지원이 아닌 한도를 정한 지원이라는 틀 안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재정위기국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시적으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위기를 해결하는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는 힘들 전망이다.

하지만 독일은 다른 어떤 유로존 국가보다 유로화 도입으로 큰 혜택을 입었다. 이 때문에 유로존이 해체될 경우 독일은 잃을 것도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일은 유로존 해체를 원치 않을 뿐 아니라 유로존의 존속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독일의 전폭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재정위기국들의 고통스러운 재정긴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자신들의 세금을 통해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독일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독일은 재정위기국들의 긴축 의지와 독일 국민의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해결사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는 어렵고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재정통합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유로본드 도입이나 유럽채무상환기금 설립 등 재정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채무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로존 차원의 유로본드나 유로빌 도입, 채무상환기금(ERF)<sup>7</sup> 설립 등이 필요하다. 독일은 현재 이들 조치에 반대하고 있지만 계속 반대할 수만은 없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독일도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유로본드 도입이나 채무상환기금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회원국 재정정책(예산정책)의 감축 및 통제 강화, 유로존 재무부 설립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앞으로 2020년을 목표로 ‘안정되고 번영된 경제통합동맹(EMU)’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금융통합(은행동맹), 재정통합, 경제정책 통합, 정치통합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첫 번째 분야로 언급된 금융통합(은행동맹)은 2012년 말까지 단일 은행감독체제가 구축되면 은행 구조조정기금 설립, 단일 은행예금 보호제도 도입 등도 구체화될 계획이다. 두 번째, 재정통합으로는 재정정책의 사전 조율, 공동 채권(유로본드, 유로빌) 발행, 유로존 재무부 설립, 재정이전시스템 등 다양한 조치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경제정책 통합에는 노동이동 촉진, 조세 조화, 행정능력 제고, 구조개혁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정치통합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명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회원국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sup>7</sup> 유럽채무상환기금(Europe Redemption Fund)은 독일경제전문가위원회가 2011년 11월에 처음 제안한 개념이다. 회원국의 국가채무 중 GDP 대비 60% 초과부분을 신설 채무상환기금으로 이관하되, 동 기금은 회원국 연대보증으로 발행된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회원국으로부터 이관된 채무를 상환하고, 회원국은 20~2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 동 기금에 이관되는 국가채무 규모는 총 2조 7,000억 유로 정도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순으로 규모가 크다. 유럽채무상환기금 역시 공동보증에 의한 유로본드 발행과 동일한 것이어서 아직은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다만, 동 기금은 EU집행위와 유럽의회 내에서 지지가 확산되고 있으며, 사민당 등 독일 야당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폐 후 10년까지만 발동할 수 있다. 한국과 EU 모두 WTO 세이프가드협정상 다자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나, 양자조치와 다자조치를 동시에 발동할 수는 없다.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는 FTA 분쟁해결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양자세이프가드 조치와 농업세이프가드 조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한·EU FTA 분쟁해결 규정에 따르면, 특정 조치가 FTA와 WTO 규범을 동시에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는 FTA상의 분쟁해결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 중 선택할 수 있다.

EU는 한·EU FTA의 잠정발효<sup>4</sup>를 위한 내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EU FTA의 양자세이프가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규칙”(이하 “양자세이프가드 규칙”)을 채택하였다.<sup>5</sup> 이러한 배경에는 한·EU FTA가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통상 조약이며, 유럽의회가 역내 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핵심 보완대책으로 동 규칙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양자세이프가드 규칙에 따르면, EU집행위는 민감한 산업 분야의 무역 흐름을 면밀히 감시(monitoring)하며, 매년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sup>6</sup> 그러나 EU집행위가 제공한 별도의 Factsheet에 따르면 2개월마다 이를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sup>7</sup>

동향관찰 조치의 목적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전망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제품이 얼마나 수입되

는지에 대해 사전에 경고하기 위함이다. 동향관찰 조치의 발동 요건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한국산 특정 상품의 수입이 EU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경우이고, 두 번째는 하나 또는 복수의 회원국에 집중된 민감 분야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위원회가 사전 동향관찰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양자세이프가드 규칙에는 동향관찰 조치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이미 프랑스가 동 조치의 개시를 요청하고 EU집행위가 공식적으로 이 같은 요청을 확인한 바,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동향관찰은 ① 회원국 요청, ② EU집행위 접수, ③ 자문위원회 회부, ④ 자문위원회 결정, ⑤ EU집행위 최종 결정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EU집행위가 직권으로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발동 요건, 즉 한국산 자동차가 EU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치가 발동되면 개시일로부터 12개월간 진행되는 데, 별도로 기간을 지정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조치의 개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문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는 EU집행위 대표가 위원장을 맡으며, 회원국 대표가 참가한다.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투표(단순 과반)를 통해 이루어진다.<sup>8</sup> 동향관찰 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만약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개시할 경우, 동향관찰의 결과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동향관찰 조치를 개시한다고 하여 이것이 세이프가드 조치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이 조치가 개시되면 소위 “동향관찰 문서(surveillance document)”가 요구된다. 동향관찰 대상이 되는 한국산 제품의 수입자는 수입 계획과 의도를 등록하고, 후속 수입을 회원국에 보고해야 한다.

## EU와 프랑스 내의 한국산 자동차 판매 및 수입 현황

2011년 상반기 프랑스 내 자동차 판매대수는 약 122만 대였으나, 2012년 상반기에는 105만 대에 그쳐 14.4% 감소했다. 특히 이 중 프랑스 자동차는 70만 대에서 56만 대로 20.2% 감소했고, 수입차량은 52만 대에서 49만 대로 6.7% 감소하는 데 그쳤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푸조가 22.9%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시트로엥 20.1%, 르노 19.6% 등 프랑스 주요 브랜드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입 브랜드 중에는 GM이 18.6%, 포드가 14.7%, 피아트가 29.8% 감소했다. 한편, 수입차 중 최대 판매 브랜드인 폭스바겐은 2.9% 감소에 그쳤고, 도요타와 BMW는 각각 6.9%, 0.1%만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현대자동차는 35.0% 증가하였고, 기아자동차도 23.4% 증가하였다.

### ★ 프랑스 자동차 판매 현황

(단위: 대, %)			
구분	2011.1~6	2012.1~6	증가율
전체	1,225,084	1,048,298	-14.4
프랑스 브랜드	703,715	561,885	-20.2
수입 브랜드	521,369	488,433	-6.7
푸조	220,928	170,272	-22.9
시트로엥	188,429	150,484	-20.1
르노	246,578	198,287	-19.6
폭스바겐	87,384	84,892	-2.9
GM(오펜, 쉐보레)	70,462	57,336	-18.6
포드	65,507	55,907	-14.7
도요타	37,246	34,677	-6.9
피아트	34,003	23,922	-29.8
현대기아	24,378	31,330	28.5

자료: 프랑스자동차제조협회(CCFA)

이와 같이 프랑스 자동차 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는 판매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 통계는 브랜드별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 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EU에서 판매되는 한국기업의 자동차 중 상당수는 현지에서

생산한 차량이다. FTA 체결로 도입된 양자세이프가드 규칙과 동 규칙 내의 사전 동향관찰 조치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동향관찰 조치나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예상하기 위해서는 EU가 FTA 발효 후 한국산 자동차를 얼마나 수입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EU집행위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 수입은 2007년 63만 대를 정점을 기록한 후, 2008년 40만 대, 2009년 34만대, 2010년 28만 대로 점차 감소하였다. 이는 현지 생산 공장의 가동이 본격화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1년에는 34만 대가 넘는 한국산 자동차가 수입되었고, 2012년 상반기에는 19만 2,000대가 수입되어 2011년 상반기의 15만 5,000대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로의 수입 역시 EU 전체 수입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2007년 3만 8,000대, 2008년 2만 5,000대, 2009년 2만 2,000대, 2010년 1만 7,000대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1년 2만여 대가 수입되어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또한, 2012년 1만 2,000대가 수입되어 2011년 상반기 8,400대를 50% 가까이 상회하고 있다.<sup>9</sup>

### ★ EU, 프랑스의 對한국 자동차 수입 추이

(단위: 대, %)		
구분	EU	프랑스
2007	629,967	37,763
2008	406,014	24,612
2009	339,914	21,611
2010	277,640	17,625
2011	344,173	19,579
2011.1~6	155,305	8,436
2012.1~6	192,140	12,482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2.8.29), Factsheet, Car Imports from South Korea.

<sup>9</sup> European Commission (2012.8.29). Factsheet, Car Imports from South Korea.

<sup>4</sup> 다자조약의 경우 계약 당사국이 많아 모든 당사국의 비준을 얻지 못하면 발효가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일정 요건을 준수하면 조약이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는 “잠정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한국정부는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정발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잠정발효라고 표현하였다.

<sup>5</sup> Regulation (EU) No 511/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11 implementing the bilateral safeguard clause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2011.5.3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145/19.

<sup>6</sup> Regulation (EU) No 511/201 Article 3 Monitoring.

<sup>7</sup> European Commission (2012.8.9.). Factsheet, EU-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What is surveillance?

<sup>8</sup> Regulation (EU) No 511/201 Article 6 Prior surveillance measures.





## 향후 전망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은 푸조가 2012년에만 상반기 8억 1,900만 유로의 손실을 기록해 8,000명을 감원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한국기업의 판매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프랑스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에 그친다. 여기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만 따진다면 1.2%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는 GM이나 르노삼성의 자동차도 포함된 수치일 것이다. 전년 대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4,000대 가량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14만 대에 달하는 프랑스 차량의 판매 감소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지 언론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의 제한조치가 가시화되면 르노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La Tribune, 8.3), 시장의 불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이며(France24, 7.27), FTA와 무관한 차량이 많아 문제 많은 투쟁이 예상된다(Le Point, 8.4)는 등의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한국정부도 EU집행위를 상대로 사전 동향관찰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sup>10</sup> 프랑스의 사전 동향관찰 개시 요청이 실제로 수용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집계된 통계만 봐도 동향관찰 조치의 개시 요건인 ‘심각한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의 객관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첫 사례이며, 현재 EU는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동향관찰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향관찰 조치의 대상이 될 경우 보다 면밀한 관찰을 위해 수입자에게 일정 부분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긴 하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동향관찰 조치의 가능성은 있으나,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동향관찰 조치 가능성보다 낮다. 수입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도 보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동향관찰과 달리 세이프가드는 관세를 인상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EU가 한국에 대해 보상할 의무도 발생한다. 위에서 살펴본 통계로는 심각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며, 수입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하기 위해 FTA를 체결한 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이번 동향관찰 요청은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할 정도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과(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피아트 CEO도 동향관찰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가 현재 진행 중인 EU·일본 FTA가 타결되면 한국에 이어 일본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동향관찰 자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앞으로 더 큰 파고가 닥칠 수 있음에 주의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 위기에 빠진 유럽 항공업계

## EU airlines in crisis

EU's air transport industry is in trouble. European airlines such as Spanair and Malev collapsed in 2012 mainly as a result of economic downturn and government's inability to support the industry. Also, the EU's decision to adopt a carbon tax system on airlines is also making it difficult for European airlines to compete. To survive in this difficult environment, EU's major airlines such as Lufthansa, Air France-KLM and the International Airlines Group are tightening their belts while changing their strategies. Also, the European Commission is carrying out various measures to boost the strength of EU airlines in times of rising global competition.

### 유럽 항공사들의 수난시대

유럽 항공업계는 직간접적으로 최대 7,485억 유로의 경제적 가치와 86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전 세계 항공업계의 GDP와 고용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4%와 15%로 매우 높다. 그리고 유럽 항공사들과 항공기 제조업체, 공항들은 모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재정위기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유럽 항공업계가 어려움에 빠졌다.

### ★ 유럽 항공업계의 GDP 및 고용 창출 규모

(단위: 억 달러, 만 개)

구분	EU	프랑스
직접적	1,760.7	186
+간접적	3,892.6	405
+유인효과	4,853.5	505
+관광업 촉매작용	7,485.2	867

주: 2010년 기준

자료: Air Transport Action Group (2012), Aviation: Benefits beyond borders.

스페인 4위 항공사인 스펜에어는 2012년 1월 27일 오후 10시 항공편이 착륙하기 30분 전에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스페인 지방정부들의 지원 여력이 소멸되고, 카타르항공이 마지막 순간에 투자를 거부하며 스펜에어가 파산하게 되었

다. 이로 인해 약 120편의 항공운항이 취소되었고, 승객 2만여 명의 발이 묶였다.<sup>1</sup> 이어 2012년 2월 3일에는 헝가리 국영 항공사인 말레브항공이 자금난으로 인해 운행을 중단하며 7,000여 명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EU집행위가 말레브항공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헝가리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1억 3,000만 유로를 상환하라고 지시한 것이 자금난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 ★ 지역별 항공사의 순익

(단위: 억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유럽	-43	19	4	-12	-2
북미	-27	41	13	19	29
아시아	26	114	53	23	31
중동	-6	9	10	7	1
중남미	5	9	3	4	7
아프리카	-1	1	0	0	0

주: 2012년과 2013년 자료는 전망치

자료: IATA (2012), Financial Forecast.

아직 생존해 있는 유럽 항공사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9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유럽 항공사들이 2012년과 2013년에 적자를 기록할 것

<sup>10</sup> 외교통상부 (2012.9.14.), “프랑스가 EU집행위에 요청한 자동차에 대한 동향관찰(surveillance)의 주요내용 및 정부대응”. 보도자료.







## ★ 항공유 변화 추이

(단위: 1갤런당 유로)



자료: Indexmundi DB

으로 내다봤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거의 모든 지역이 적자를 기록한 반면, 2012년과 2013년에는 유럽이 홀로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유럽 항공사들은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sup>2</sup>과 폭설<sup>3</sup> 등 자연재해로 두 차례의 항공대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며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제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며 경기가 침체에

<sup>2</sup> 2010년 4월 14일 아이슬란드 남부에 있는 에야프랴알라요쿨(Eyjafjallajökull) 화산에서 폭발과 함께 뿔어져 나온 화산재가 유럽 상공을 덮으며 항공대란을 초래했다. 4월 17~18일에는 17개 회원국들의 영공이 차단됐고, 2개 회원국은 부분적으로 차단했다. 36개의 유럽항공사를 대표하는 유럽항공협회(A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15일과 23일 사이 총 5만 2,400편의 항공운항이 취소되며 총 8.5억 유로의 수입을 잃었다고 한다(Association of European Airlines (2010.4.26). Short and mid-term requirements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Icelandic volcano eruption.)

<sup>3</sup>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 서유럽과 북유럽에 폭설이 쏟아지며 활주로, 철도, 도로가 모두 얼어붙었다. 영국의 히드로 공항과 게트워 공항이 마비되며 약 50만 명의 관광객들의 여행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공항에서 밤을 보내는 상황이 벌어졌다. 복구 작업이 지연되어 눈보라가 지나간 3일 후에도 히드로, 프랑크푸르트, 더블린 공항에서 각각 752편, 340편, 230편이 취소되는 등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Heathrow Tries to Dig Out. (2010.12.21.). Wall Street Journal.)

빠지고, 항공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유럽 항공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된 것이다.

## EU의 항공기 탄소세 도입도 부담을 가중

재정위기, 고유가와 더불어 EU가 2012년 초에 도입한 항공부문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도 항공사들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EU 역내에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sup>4</sup> 주변국들은 이 제도로 인해 항공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미국 상원은 9월 22일 항공기 탄소세에 관한 거부 법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치면 미국 항공사들은 EU의 규정을 무시할 수 있게 된다.<sup>5</sup> 중국은 항공사들이 EU 탄소세 지불을 거부한 바 있는데, 중국정부는 EU 항공사들에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중국과 인도는 유럽 에어버스에 주문해놓은 항공기 제작 건을 보류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가동하기 시작했다.

EU 규제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유럽 항공사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에어버스,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브리티시에어웨이즈 등 9곳의 유럽 항공사 및 항공기 제조사들은 지난 3월에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총리에게 탄소세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 특히 재정위기로 경기가 급랭한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유럽 내 많은 항공사들이 위기에 빠지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sup>6</sup>

이런 유럽 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EU는 온실가스

<sup>4</sup> European Commission. (2012). Reducing emissions from the Aviation sector. <[http://ec.europa.eu/clima/policies/transport/aviation/index\\_en.htm](http://ec.europa.eu/clima/policies/transport/aviation/index_en.htm)>

<sup>5</sup> EU Airline Emissions Rule Under Fire by US Senate. (2012.10.1.).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up>6</sup> Delay EU carbon levy, says air industry. (2012.3.11.). Financial Times.

감축을 목적으로 항공사 ETS 적용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위기에 빠지는 유럽 항공사들이 속출하고 주변국들의 반발이 더욱 강화되면서 탄소세 문제는 결국 유엔 등을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 유럽 항공사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유럽의 대표 항공사들은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인력 감축은 물론 기존에 브랜드와 여행의 질을 앞세웠던 경영 전략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역내 기업들 간 통폐합을 통해 시너지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치솟고 있는 직원들의 불만이 잠재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의 2위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2014년 말까지 15억 유로를 절감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나섰다. 2012년 5월 관리직 3,500명과 케이터링 직원 1,000명을 줄여 나가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9월에는 단거리 수송노선을 저가 항공사인 저먼윙스와 통합하여 2013년 1월부터 연 1,800만 명의 승객을 대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2년 2/4분기 루프트한자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한 3.6억 유로를 기록했다.<sup>7</sup> 하지만 비용절감 노력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9월 7일에는 승무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며 루프트한자 전체 항공편의 절반 이상인 1,000여 편이 취소되었다. 노사는 지난 13개월 동안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협상해왔으나 사측의 비용절감 노력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 최대 항공사인 에어프랑스-KLM도 비용절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6월 에어프랑스-KLM은 2015년까지 20억 유로를 절감하기 위해 5,000

<sup>7</sup> Lufthansa to combine European flights to low-cost unit. (2012.9.20.). Bloomberg.

여 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유럽 지역 사업부문을 크게 세 개의 파트로 조정해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먼저, 소도시를 집중 공략하기 위해 브리트에어, 리지어날, 에어린에어를 통합하고, 저가항공사 트랜스비어를 중심으로 여행객들을 공략하며, 대표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에도 “노서비스(no frills)” 좌석 등급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힘입어 2012년 2/4분기 에어프랑스-KLM의 영업손실은 전 분기 1억 5,000만 유로에서 6,600만 유로로 줄어들었다.<sup>8</sup> 하지만 앞으로 파업 등 불안요소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아직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2011년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에 대비해 브리티시에어웨이즈(英)와 이베리아(스페인)는 인수합병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인터내셔널에어라인스그룹(IAG)이 설립되었고, 400개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유럽 2위 항공사로 부상했다. IAG는 2016년부터 연 4억 유로 규모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중 60%는 비용절감을 통해, 40%는 매출 확대를 통해 달성할 전망이다. IAG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저가 항공 시장 진출을 위해 2012년 3월에 저가 항공사인 이베리아익스프레스를 출범시켰다. IAG도 여타 항공사들과 마찬가지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베리아익스프레스 조종사들이 경쟁사에 비해 낮은 임금에 불만을 표하며 파업을 단행하였다.

## 글로벌 항공업계의 경쟁 심화

앞으로 항공업계는 비용절감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인수합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유럽 항공사들은 단기간 내에 경영난을 극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럽 항공사들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sup>8</sup> Air France-KLM Quarterly Loss Narrows on Cost Reductions. (2012.7.31.). Bloomberg.







한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여행객 수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에서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늘어날 세계 항공

#### ★ 세계 10대 항공사들의 유상여객킬로

(단위: 10억 RPK)

항공사	지역	2000년	2011년	변화율
델타에어라인	미국	180	310	72.2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미국	203	292	44.1
에어프랑스-KLM	EU	153	217	41.7
아메리칸 에어라인	미국	187	203	9.0
IAG 그룹	EU	161	169	4.5
사우스웨스트에어라인	미국	68	167	145.4
에미리트 에어라인	중동	20	153	676.3
루프트한자	EU	89	141	59.3
중국남방항공공사	아시아태평양	21	122	479.1
관타스그룹	아시아태평양	64	107	68.1

자료: Air Transport World, Flightglobal.

수송 규모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태평양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유럽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유럽 항공사들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흥국, 특히 아시아에 기반을 둔 항공사들은 선방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 항공사들의 추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신흥국 항공사인 에미리트항공과 중국남방항공공사의 유상여객킬로(RPK)<sup>9</sup>가 2000년대 세계 상위 10대 항공사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EU집행위의 항공업계 활성화 노력

이같이 유럽 항공사들이 어려움에 빠지자 지난 9월 EU 집행위는 항공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

<sup>9</sup> 항공 편당 유상 승객 수에 비행거리를 곱한 값의 합계

했다.<sup>10</sup> 첫째, EU집행위는 중국, 인도, 러시아, 걸프지역, 일본, 인도, 아세안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및 국가와의 항공협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튀니지, 터키, 이집트 등과 같은 주변국들과는 2015년까지 항공협정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 EU집행위는 해당 국가들과 항공협정을 맺을 경우 연 120억 유로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11</sup> 현재 EU의 개별 회원국이 맺고 있는 양자 간 항공협정이 EU 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역내시장의 경쟁을 심화시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저가항공의 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유럽의 대표 항공사들이 항공협정을 통해 장거리 비행 시장에서 더욱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EU 집행위는 외국 항공사들의 비공정 경쟁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근 신흥국 항공사들이 정부 지원, 가격 담합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는데, EU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거래 조항”을 EU 차원에서 마련해 회원국들이 이미 도입한 항공협정에 삽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EU집행위는 미국 등 주요국들의 항공사 외국인 소유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U는 외국인 항공사 소유 지분을 45%로 제한한 반면, 미국은 25%에 불과하다. EU 회원국 간에는 이미 항공사 지분 소유가 자유로운 상태다. EU집행위는 EU 역내 합병사례<sup>12</sup>에서 볼 수 있듯이 EU와 해외 항공사 간 M&A를 통해 더욱 경쟁력이 있는 항공사들이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up>10</sup> European Commission (2012).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he EU's External Aviation Policy-Addressing future challenges. COM(2012) 556 final.

<sup>11</sup> Booz and Company (2012). Development of the EU's future external aviation policy.

<sup>12</sup> 에어프랑스와 KLM로열더치항공이 2004년에 합병하였고, 루프트한자그룹은 스위스에어라인, 오스트리아에어라인, 브뤼셀에어라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리티시에어웨이스와 이베리아가 2011년에 합병하여 IAG가 탄생하였다.

#### 생존을 위해 해외 진출을 강화

유럽 항공업계는 재정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먼저 구조조정과 저가항공 모델 도입을 앞다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글로벌 항공업계 판도 변화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럽 인구가 5억 명에 불과한데다, 앞으로 유럽의 항공수송 규모 증가율은 세계 평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항공업체들은 EU 이외의 해외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항공사들의 코드셰어<sup>13</sup>가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공사들의 글로벌 M&A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 유럽 지역 노선이 강화되며 한국 등 신흥국들의 소비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sup>13</sup> 편명공유 또는 좌석공유를 의미하는 코드셰어는 제휴 항공사의 일정 좌석을 할당받아 자사의 항공편명으로 판매해 수익 증대와 운항편 확대를 모색하는 방안이다.





# 가즈프롬에 대한 반독점 제재의 법률적 내용과 정치-경제적 함의

## EU's antitrust inquiry on Gazprom

In September, 2012, the European Commission antitrust authorities opened a formal investigation into whether the Russian energy company “Gazprom” had blocked fair competition in natural gas market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e Commission announced that it has concerns that Gazprom may be abusing its dominant market position in breach of Article 102 of the Treaty of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Following this, Russian President Putin has signed a decree giving the government the right to protect Gazprom from an antitrust probe by the EU. The new law prohibits companies deemed strategic from disclosing information, disposing of assets or amending agreements without Russian authorities’ ratification in the case that the claims are initiated by foreign states or entities. If the conflict between the EU and Russia intensifies, Russia may once again block its natural gas supply as it did back in 2006.

### EU집행위의 가즈프롬에 대한 조사와 러시아의 반발

지난 9월 EU집행위가 가즈프롬(Gazprom)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 가즈프롬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EU와 러시아 양측의 정면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EU집행위는 9월 4일 유럽 중동부의 10개 EU 회원국에서 천연가스의 공급, 수송 및 저장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독일과 체코의 가즈프롬과 RWE, 독일과 헝가리의 Eon, 오스트리아의 OMV, 불가리아의 불가르가즈(Bulgargaz)와 오버가스(Overgas), 슬로바키아의 SPP, 폴란드의 PGNiG 등 20여 개 회사들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세계 최대 천연가스 공급업체인 러시아의 가즈프롬사와 관련된 기업들로 사실상 가즈프롬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푸틴은 9월 9일 “EU집행위가 유로존 위기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재정 부담을 러시아에 떠넘기려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나아가 11일에는 러시아 자국의 전략적 기업이 정부 승인 없이 외국이나 외부 조사기관에 정보공개, 자산처분, 계약수정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하여 사실상 가즈프롬에 대한 EU집행위의 반독점 조사를 거부할 것을 천명했다. 만약 양측의 극단적인 대립이 계속될 경우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 가즈프롬의 반독점법 102항 위반에 대한 혐의

EU집행위는 가즈프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게 된 근거로 반독점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세 가지 혐의를 들었다. 첫째, EU 역내에서 천연가스의 자유로운 공급을 방해했고, 둘째, 에너지 수입 다변화 국가에 대해 지나친 압력을 행사했고<sup>1</sup>, 셋째, 천연가스 가격을 유가와 연동시켜 장기계약을 맺음으로써 역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혐의는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업이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유시장 원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EU의 반독점법에 관련된 것이다<sup>2</sup>. 이번 조사대상 회원국 중에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1 이번 조사는 가스 공급의 다변화를 시도한 리투아니아가 가즈프롬으로부터 가격차별을 받은 후 EU집행위에 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2 EU의 지배기업 독점방지 조항 102항의 내용은 미국의 같은 법인 ‘셔먼법(Sherman Act)’보다 더 엄격하다. 102항에서는 지배 기업들에 대해 ‘경쟁을 존경’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미국과 유럽에서 공히 문제가 되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 브라우저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의 독점법 위반에 대한 판단에서 미국 법원은 끼워 팔기의 친경쟁적 효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했지만 유럽 법원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여부를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 경쟁에 관한 법률 1조 102항의 개요

EU 시장 내에서 회원국 간의 교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위남용행위로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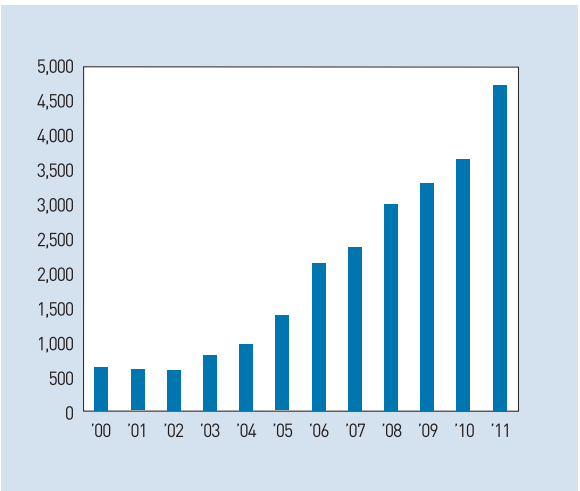
- a. 불공정한 가격 혹은 교역 조건을 직간접적으로 강요
- b. 생산, 시장, 혹은 기술개발에 제약을 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
- c.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차별적 조건을 적용하여 거래 상대방이 불리한 경쟁 상황에 봉착
- d. 계약의 결과를 이 계약과 상관없는 다른 주체들도 승인하도록 강요

등은 천연가스 공급의 100%를, 나머지 폴란드, 헝가리, 체코 3개국은 각각 82%, 83%, 69%를 가즈프롬에 의존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가즈프롬의 지배적 지위가 확고한 상태다.

첫 번째와 세 번째 혐의는 EU의 반독점법 102항의 a, b항목에 해당하고, 두 번째 혐의는 c항목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만약 EU집행위 조사 결과 가즈프롬의 102항 위반 사실이 확정될 경우 가즈프롬은 총 매출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가즈프롬의 총 매출이 1,581억 달러였던 201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벌금이 158억 1,000달러에 이른다. 그런

### ★ 가즈프롬의 연간 총 매출액

(단위: 10억 루블)



자료: Gazprom

데 유럽 중동부 국가들이 EU 가입 훨씬 이전인 1994년에 이미 EU 가입 조건으로 EU의 반독점 규정을 수용했기 때문에 1994년부터 합산할 경우 가즈프롬의 벌금은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EU와 러시아의 에너지 전면전 돌입

그러나 이번 반독점 조사의 실제적인 함의는 법률 위반 여부의 확인과 그에 상응하는 벌금 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부터 가스공급을 매개로 한 EU와 러시아의 에너지 전면전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역내 자유공급 금지 혐의는 EU의 단일시장 체제, 특히 에너지 시장의 통합에 대한 러시아의 근본적인 도전에 대한 응수에 해당한다. 그동안 가즈프롬은 EU의 각 회원국들과 개별 계약을 맺어왔는데, 모든 계약에 다른 EU 회원국으로의 재수출 금지 조항을 첨부했다. 한마디로 EU를 개별 국가들로 구분하여 EU의 단일시장 개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EU는 2006년부터 에너지 대외정책에서 ‘창구단일화(Speak with one voice)’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가스 구매의 경우에도 EU 회원국들이 더 이상 개별적으로 비회원국가와 계약하지 않고 EU라는 하나의 주체, 즉 거대한 구매자 카르텔이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될 경우 EU는 러시아와의 가스 가격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공급 다변화 제한 혐의에는 對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는 EU와 EU에 대한 시장장악력을 높이려는 러시아의 정책 대결이 반영되고 있다. 러시아는 카스피해의 가스를 수급받기 위해 새로운 파이프라인인 ‘나부코’를 건설하는 EU에 대응하여 발틱해를 관통하는 북류(Nord Stream)와 지중해를 관통하는 남류(South Stream)를 건설하고 있다. EU집행위는 러시아의 이러한 반대 시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가스 판매자가 가스공급수단,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을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제3의 에너지 패키지(Third Energy Package)’ 조항을 입안하여 2011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패키지에 따르면 가즈프롬은 지금 건설 중이거





나 건설 예정인 파이프라인 외에도 이미 사용 중인 파이프라인에서도 손을 떼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조항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예외조건은 해당 파이프라인이 이른바 ‘유럽횡단-네트워크(Trans-European Networks)’에 포함되는 것이다. 현재 EU 집행위는 ‘북류’를 네트워크에 포함시켰지만 ‘남류’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 불포함 의사를 표명했고 가즈프롬은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 다변화에 대한 가즈프롬의 제한 행위에 대한 EU집행위의 본격적인 수사는 가즈프롬의 ‘남류’ 프로젝트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세 번째, 가스 가격의 유가연동 협의는 러시아 정부의 가스수출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정부는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하며 정부 예산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즈프롬의 수익구조에서 유가연동 장기계약 조건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 조건은 가스전 추가 개발이나 파이프라인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장기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지속되는 유럽의 재정위기, 대체가스로 등장한 셰일가스, 값싼 중동산 LNG 증가 등으로 가즈프롬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가즈프롬은 유가연동 장기계약 조건을 포기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2012년 들어 현재까지 수익이 2011년 대비 23% 이상 감소했다. 게다가 러시아 정부는 가스 가격 유지를 위해 OPEC과 같은 국제적인 가스 카르텔을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발동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2010년 4월 알제리에서 열린 가스수출국포럼(GECF)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11개국 각료들은 천연가스 가격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스 가격을 유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70%를 확보하고 있는 GECF의 이와 같은 결정이 실현된다면 EU의 유가연동제 폐지 요구에 대해 러시아가 쉽게 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이번 EU집행위의 가즈프롬 조사는 양측에 모두 거시 전략적인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쉽게 어느 한 쪽이 손을 드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지배권 남용 관련 사건으로 유럽사법재판소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EU집행위의 해당 주무기관인 경쟁총국(DG Competition)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만 조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가 시작된 이상 추가 정보가 더욱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 런던 시립법률학교의 앨런 라일리(Alan Riley) 교수는 ‘가즈프롬의 강력한 저항은 영웅적일 수 있겠지만 결국 헛된 것으로 끝날 것이다. 빌 게이츠에게 물어보라’라고 충고한다<sup>3</sup>. 그러나 러시아의 EU 대표부 책임자인 블라디미르 치조프(Vladimir Chizov)는 ‘가즈프롬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방어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경우<sup>4</sup>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달리 가즈프롬은 러시아 최대 국영기업으로 소송은 민간기업 차원의 법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기에 EU도 행보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의 강은 양면 작전

물론 EU의 법률적 해석 차원에서 가즈프롬의 독점법 위반 결정은 거의 확정적이며 그에 따른 제재와 벌금 부과도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정치 외교 차원에서 EU를 최대한 압박하며 국면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8년 이상 지속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우처럼 사건 심의와 확정 결심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러시아 측도 이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며 피해를 최소화하여 상황을 반전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주요한 전략은 강은 양면 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러시아는 이미 이 작전을

<sup>3</sup> Riley, A. (2012. 9. 11.). Gazprom vs. the Commission. *The Wall Street Journal*.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0872396390443921504577643173700034222.html>>

<sup>4</sup> Foo Yun Chee. (2012. 9. 14.). EU's Gazprom probe unlike Microsoft battle-Russian diplomat. *Reuters*.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9/14/eu-gas-diplomat-idUSL5E8KEFCQ20120914>>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8년이 넘는 소송 끝에 완패하고 약 10억 유로의 벌금을 냈고, 구글 건도 진행 중이나 패색이 짙은 상황

전개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푸틴 대통령은 EU집행위의 압수수색 이후 즉각적으로 러시아정부의 허락 없이는 가즈프롬이 EU 측에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으며 가격인하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또한 9월 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EU의 제3의 패키지에 대해 WTO에 제소했으며, EU의 대응을 명백한 보호주의라고 비난했다. 한편, 가즈프롬은 9월 4일에 시행된 EU집행위의 압수수색 이후에 첫 번째 혐의에 해당하는 EU 역내 재수출을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오스트리아 에너지 그룹 OMV와 이탈리아의 ENI가 가즈프롬으로부터 수입한 가스를 재수출할 수 있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 가격 문제에서도 가즈프롬은 상당히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이미 2012년 1/4분기에 유럽의 장기계약 사업체들에게 25억 1,000만 달러를 환불해주었고, 연말까지 12억 8,000만 달러를 추가로 환불할 예정이다.

### 국면전환을 위한 가즈프롬의 전략

강은 양면 작전으로 시간을 벌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가즈프롬은 실질적인 국면전환을 위한 노력도 빼놓지 않을 것이다. 먼저 EU집행위의 창구 단일화 정책에 대해서는 유럽의 메이저 수입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실질적인 무력화 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장기계약 사업체들을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로 선정해 EU 시장의 분할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미 프랑스의 Gaz de France (2030년), 독일의 E.ON Ruhrgas (2035년), Wintershall (2030년), 이탈리아 Eni (2035년) 등 메이저 업체들과 장기계약을 연장하여 EU집행위의 권고를 사실상 무력화하는데 성공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EU 시장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낮추기 위해 시장 다변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동진 정책을 선포했고, 지난 9월

에 있었던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다. 2030년까지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에 따르면 현재 0%에 가까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비중을 2030년에는 24~27%까지 올릴 예정이다.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유럽에 대한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로 사용될 것은 당연하다. 마지막으로 가즈프롬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가스 가격의 유가 연동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스수출국포럼(GECF)을 가스 카르텔 차원으로 승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천연가스 시장에 유가 연동제를 정착시키는 외교적 노력에 매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스 카르텔이 형성될 경우 EU에 대한 외교적 압박은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스 생산국들이 매우 불균등한 생산과 판매 조건에 처해 있어 이번 사건 종결 전에 카르텔 형성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유가 연동제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지 않은 편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어떤 경우든 EU와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이번 EU집행위의 조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예상하지 않은 때에 급진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경우 상호 관계는 계속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EU와 러시아는 떨어질 수 없는 상생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EU는 러시아의 가스 없이 살 수 없고, 러시아는 EU의 최대 가스 시장이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든 양측의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관건은 그때까지 양측이 상생의 관점에서 서로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것 이리라 판단된다. ★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EU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단상(斷想) : ‘사회평화’를 위한 유럽통합은 가능한가?

## Some thoughts on the Nobel Peace Prize to the EU

The Nobel Committee decided to award the Nobel Peace Prize to the EU for its work over six decades of advancing “peace and reconciliati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Taking this opportunity, it seems important to think about the eurozone sovereign debt crisis as it is directly connected to making peace in Europe. This is because the democratic values are being threatened as the crisis is causing friction between member states and social conflict within countries. Furthermore, we must recognise that the welfare states have been weakened and the society has become more unequal. Therefore if the EU wishes to be honoured about receiving the Nobel Peace Prize, it needs to achieve social peace.

### 유럽의 ‘평화’에 대한 집념

EU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작은 논란이 일고 있다. 노벨평화상위원회는 10월 12일 EU가 지난 60년간 유럽대륙의 평화와 통합,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기여한 데 대해 노벨평화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이 더욱 분발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노벨평화상위원회가 부연설명을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분발하라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더욱 모호한 수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 ‘이상한 노벨평화상’이 진정으로 유럽대륙의 평화와 통합,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작금의 유로존 위기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 불균형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로존 위기를 계기로 EU의 민주주의 결핍, 회원국 간 분열, 사회적 갈등과 폭력, 이민거부 등이 나타나거나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유럽의 ‘평화’는 30년 전쟁을 종식한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Peace of Westfalen)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베스트팔렌조약으로 국가주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부여받았고, 국가 간 평화적 공존이 지상목표가 되었다. 베스트팔렌조약을 체결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뮌스터의 구시청사에는 ‘평화의 방’이 있다고 한다. 유럽은 작은 지역 내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뤄왔기에 ‘평화’에 대한 갈망이 유난했다. 베스트팔렌조약으로 유럽은 주권국가 간 체제로 전환되었고, 평화를 위한 세력균형과 국제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국

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동시에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체제에서 국가는 가장 강력한 행위자로 간주되었다. 근대 유럽의 정치적, 사회적 질서에서는 국가가 핵심이 되었다. 그 후 유럽의 국가들은 의회제를 발전시켰고, 시민권(자유권, 정치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에 기반하여 민주주의를 심화시켜 왔다. 300년 가까이 구축된 이러한 유럽의 국민국가 체제는 20세기 전반의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경로가 바뀌었다. 바로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창설을 시작으로 지금의 화폐통합에 이르기까지 국민국가를 뛰어넘는 유럽통합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 혼돈의 유럽에 반향을 불러일으킨 노벨평화상 수상

유럽은 통합 과정에서 몇 번의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까지 이루면서 국제적으로 많은 부러움을 샀다.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유럽통합의 심화와 단일통화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회원국 확대, 우호적인 경제지표 등 유럽통합의 외형적 성과에 묻혔다. 그러나 유럽의 시장적, 경제적, 사법적 통합이 심화되고 글로벌 금융자본주의에 깊이 편입되면서 EU는 기존의 국민국가 체제와 새로운 초국적 체제 간의 간극과 모순이 확대되는 문제에 직면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부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 및 채무 위기가 심화되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물론 EU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볼 수 있듯 국가와 EU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고조되어 왔다.

2009년부터 시작된 유로존 위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국민과 국가주권을 외치는 극좌·극우의 부상 은 어디까지 갈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통합과 은행통합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의 재정위기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방 또는 유럽제국의 형성을 가져올 정치통합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상황이다. 유로존 위기 이후 EU의 핵심 국가들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위기대응 과정에서 EU 내 분열, 특히 남유럽과 북유럽 간 적대감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유럽의 국민국가 극복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초국가적 정치공동체 형성이라는 유럽 프로젝트는 미완의 상태에서 현재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EU의 노벨평화상은 혼돈스러운 유럽에 작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 유럽통합과 사회평화(Social Peace)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 1년 전인 1895년에 작성한 유서에서 노벨평화상을 노르웨이가 수여하게 한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 당시 노르웨이는 스웨덴에 합병되어 연합 국가의 상태에 있었다. 노벨이 평화상을 노르웨이가 주관하도록 한 것에 대해 여러 추측이 있지만 노벨이 생전에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평화상을 구상할 만큼 ‘평화’를 중시한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그 ‘평화’는 단순히 물리적 전쟁의 억제만이 아니라 ‘사회평화’라는 포괄적 평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역대 많은 평화상 수상자들이 포괄적 평화, 즉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연합국가는 1905년에 평화적으로 분리되었고 현재 두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사회적으로 평등한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있다.

EU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정치적 논란을 가져오는 것은 유로존 위기 이후 긴축을 강조하는 EU의 대응 방식, 특히 독일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유로존 내의 재정위기 국가들은 긴축정책으로 정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

투갈 등에서는 ‘평화’가 사라지고 긴축 ‘전쟁’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로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실업과 생활고로 인한 ‘경제적 자살’이 크게 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유럽에서 자살이 증가한 시점은 재정위기가 불거진 2008년부터다. 유럽 10개국 중 9개국에서 2007년에 비해 2009년 자살이 증가했다. 이 기간 그리스의 자살은 19%나 늘었다. 그리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는 2010년 2.8명에서 2011년 5명으로 1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sup>1</sup> 긴축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사회안전망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 영국에서도 재정위기 이후 자살이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실업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영국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업률이 1% 증가할 때마다 65세 이하 인구의 자살률이 0.8% 늘어났다고 한다.<sup>2</sup>

물론 EU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있었다. 그러나 ECB의 대대적인 국제채입 프로그램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EU와 ECB,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재정위기 국가들은 경기침체에도 긴축정책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고가 갈수록 악화되었다. 긴축정책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국민이 긴축을 반대하며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EU, IMF, 철수하라!”고 외치면서 외부세력에 대한 반대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전쟁으로부터의 평화는 지켜졌지만 ‘사회평화’는 멀어지고 있다.

### 신자유주의적 유럽통합의 사회적 결과

유로존 위기의 근본 원인은 신자유주의적 유럽통합과 단일통화에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자유로운 자본과 규제를 탈피한 시장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유럽통합은

<sup>1</sup> ‘Economic suicides’ shake Europe as financial crisis takes toll on mental health. (2012. 8. 15.). Washington Post.

<sup>2</sup> “유럽 경제적 자살 급증 그리스 1년새 두 배”. (2012. 8. 16.). 『한국일보』.



비대칭성을 심화시켜 한 사회 내에서의 격차는 물론 국가 간,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을 확대해왔다. 세계경제가 양호할 때는 이러한 문제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유럽통합의 문제들이 드러났다. 최적통화지역 이론에 어긋나는 유로화 문제뿐 아니라, 친자본적 엘리트 중심의 유럽통합은 일반시민과의 괴리를 초래했다. 자본계급은 물론 노동계급 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계급과 그렇지 못한 계급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이러한 계급 내, 계급 간의 관계에 개입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국가의 역할과 힘은 크게 축소되었다.

세계화와 금융자본주의의 발전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의 활동영역이 주권국가와 깊이 연계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 및 채무위기로 전이되었다. 유로존은 단일통화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회원국이 충격을 받게 되면 다른 회원국에게도 쉽게 영향이 미친다. 따라서 현재의 유로존 위기와 유럽통합의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난 30여 년간 진행되어온 단일시장의 확대와 신자유주의적 유럽통합의 결과이자 한 계라 할 수 있다.

1987년에 발효된 유럽단일시장의정서(Single European Act)는 EU 회원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사회적 결속(economic and social cohesion)’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유럽의 시장통합으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업, 근로조건 후퇴 등 근로자의 삶의 질에 대한 우려와 지역 간, 계층 간 격차와 갈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sup>3</sup> EU집행위도 유럽의 결속과 연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유럽의 경제통합은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EU집행위는 1988년 ‘단일시장의 사회적 차원’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고용증대 방안과 사회적 보호(즉, 복지)를 제안했다.

그러나 유로존은 국가 권력의 대부분이 국민국가에서 초국가적 공간으로 분산된 반면, 정치는 여전히 국가의

영토 주권 경계에 따라 제한되어 있다. 사회적 요구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탈정치화된 유럽통합뿐 아니라 개별국가마저 시장 및 자본 논리에 구속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힘(권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타협 및 정치적 조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계급협력이나 계급타협을 위한 공적 기제가 약화되면서 유럽통합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장이 되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한 바와 같이 시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바를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시장’이기 때문이다. 헌법적으로 감독하고 감시하며 지휘해야 할 의무를 지닌 의회와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신뢰 위기(crisis of trust)’로 국가기관의 행위 가능성과 능력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다. 이렇듯 국민의 바람과 요구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EU는 심각한 국민국가의 정치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 EU가 처한 위기는 EU, ECB, 주권국가, 지방정부 등 쉽게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구속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베스트팔렌조약의 국가주권과 국가기구를 가지고 초국가적이고 상호의존적인 현실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그것이다. EU는 통합된 유럽에 적합한 제도와 기구, 규범을 가지고 있지만 다수의 유럽인은 이에 대해 지지하지 않고 있다.

### 배제와 분리 논리의 폭력성

EU의 노벨평화상 수상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제 EU가 국민국가와 다른 차원에서 유럽시민 연대와 결속에 기여하고 글로벌 자본 등과 같은 외부의 압력과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국가와 EU 간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통합된 유럽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유로존 일부 국가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EU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 그러나 EU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 스웨덴 재

무장관의 발언은 노벨평화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안테르스 보르그 스웨덴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향후 6개월 안에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sup>4</sup>

스웨덴은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재정흑자를 내고 있으며, 국가채무 또한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전반의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를 경험한 스웨덴으로서는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 국가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스웨덴은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스웨덴의 경험을 주목하자는 주장이 실제로 많았다. 스웨덴의 경우,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 산업 경쟁력, 공정한 부담, 사회적 합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리스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는 EU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그리스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유럽의 경우 구조개혁이 미흡한 상황에서 낮은 재정효율성, 정치사회적 압력과 포퓰리즘 정치, 유로존의 프리미엄으로 인해 국채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고, 재정지출 중심의 경제로 인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최적통화지역 이론에 따르면, 단일화폐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력이 비슷하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한다. 문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비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 경쟁력과 경제력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유로존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최적통화지역 이론에 부합된다. 유로존 회원국 간 경제력의 불균형, 즉 표준편차가 갈수록 커지는 문제를 최적통화지역 이론에 따라 해결한다면 극단의 사례를 제외하면 된다. 현재의 양극단은 독일과 그리스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회장인 조지 소로스의 남유럽을 돕지 않는 독일은 유로존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최적통화지역 이론에 부합된다. 그리스든, 독일이든, 두 나

라 모두든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면 경제적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론상 예측일 뿐 현실은 다를 수 있다. 무엇보다 유로존 회원국의 탈퇴가 가져올 다양한 비용은 계산하기도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경제논리가 적용될 경우 언젠가 또 다른 극단의 사례를 배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주기적으로 위기에 봉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제와 분리는 유럽통합의 정신과 상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권국가(국민)인 회원국에 대한 폭력이기도 하다. 결국 노벨평화상이 말한 EU의 성취, 즉 유럽의 평화와 통합은 신기루가 될 것이다.

### EU 노벨평화상이 영광이 되려면 진정한 평화를 구현해야

이제 무엇에 대해, 어떻게 분발할 것인가? 유럽이 통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평화를 구현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유럽통합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와 모순에 다수의 유럽인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발도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유럽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지난 30여 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복지국가와 평등수준이 크게 약화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재정위기 이후 엄격한 긴축정책과 이에 반발한 극심한 사회적 갈등, 분열, 폭력은 유로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누적된 사회 불평등과 2009년 재정위기 이후의 고실업 및 대대적인 긴축으로 사회적 충격은 계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통합과 생산요소의 불균등한 이동은 경쟁력이 약한 지역에 막대한 경제사회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 최근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긴축전쟁은 이에 대한 반발과 다름없다. 남유럽 뿐 아니라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일어난 긴축반대 시위와 파업의 핵심은 사회적 부에 대한 분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이 보여주듯이 사회평화는 가능하다. EU 노벨평화상이 영광이 되려면 이러한 사회정의에의 요구를 수렴하는 한편 모두를 위한 경쟁력 강화로 유럽에 ‘내부의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 ★

<sup>4</sup> Sweden's Borg says Greece could exit euro within six months. (2012. 10. 13.). Reuters.

<sup>3</sup> 김인춘 (2012), “사회적 차원에서 본 유로존 위기와 유럽통합”, 『EU Brief』, 4(4).



# 유로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로화의 역할

Intra-Euro rebalancing is inevitable, but insufficient.

A purely intra euro rebalancing strategy has limits because: the share of intra euro trade has declined; intra euro trade balances have already adjusted to a great extent; the intra euro real exchange rates of Greece, Portugal and Spain have also either already adjusted or do not indicate significant appreciations since 2000. The euro has depreciated recently, but more is needed to support the extra euro trade of southern euro area members. A weaker euro would also boost exports, growth, inflation and wage increases in Germany, thereby helping further intra euro adjustment and the survival of the euro. Therefore, the ECB should consider supplementary policies to achieve a weaker euro by a more 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stance.

남유럽 재정위기의 빠른 해소가 어려워지면서 유로화 가치가 지속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재정위기의 여파로 나타나고 있는 유로화 약세가 역설적으로 위기극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브뤼셀 연구소가 2012년 8월 발표한 <유로존의 불충분한 불균형 해소(Intra-Euro rebalancing is inevitable, but insufficient.)>라는 보고서인데, 유로존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Intra-euro adjustment strategy)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유로화의 약세가 향후 위기 극복의 동인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유럽 중앙은행(ECB)의 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존 회원국 간의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은 경상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반면 독일, 네덜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며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역내 불균형은 개별국가 차원의 단위노동비용과 실질실효환율 조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단위노동비용을 이용하여 산출한 실질실효환율이 하락하면 가격경쟁력과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유럽 국가들의 단위노동비용과 실질실효환율의 하락으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상수지도 서서히 회복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보고서는 여기에 따르는 한계점들을 제시한다. 먼저 역내 실질실효환율의 조정만을 통해서서는 불균형 해

소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로화 도입부터 위기 이전까지 남유럽 국가들의 실질실효환율은 절상된 반면, 북유럽 국가는 절하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부터 남유럽 4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적정수준으로 조정되는 과정에 들어섰다. 지난 몇 년간 아일랜드의 실질실효환율은 급격히 절하되었고, 스페인도 가파른 상승세가 꺾였다. 더욱 주목할 것은 오히려 역외국가에 대한 실질실효환율이 역내에 비해 훨씬 높이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유로화의 약세가 역외 실효환율의 절하를 이끌기도 했지만 여전히 역내 실질실효환율에 비해 높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유로지역 내 교역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1999~2011년 동안 유로지역의 최대적자국인 스페인의 총 수출에서 역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서 53%로, 역내 수입은 60%에서 47%로 감소하였으며, 최대흑자국인 독일의 경우 역내 수출은 45%에서 38%로, 역내 수입은 48%에서 43%로 감소하였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2007년 이후 역내 무역수지가 상당 수준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유로지역의 국가들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스페인의 적자와 독일의 흑자가 GDP 대비 0%에 가깝게 수렴하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GDP 대비 5%의 스페인 무역적자는 역외무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독일의 흑자도 EU 밖의 무역에서 발생하였다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유로지역의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고려할 때 역외무역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위노동비용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에서도 어려움을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이후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 생산성 향상과 임금조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명목임금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단위노동비용이 낮은 북유럽 국가들의 임금상승 및 재정확장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시행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리하면 개별국가 차원에서 순수하게 역내 실질실효환율과 단위노동비용 조정 등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한 유로지역 차원의 대응정책으로 공동통화인 유로화 가치의 하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ECB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7월 ECB의 درا기 총재가

“유로지역 안정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The ECB is ready to do whatever it takes to preserve the euro).”면서 발표한 무제한 국채매입 결정은 유로화 절상을 유도했다. 반면, 같은 달 단행된 ECB의 금리인하는 즉각적으로 유로화의 약세를 이끌었다. 이처럼 ECB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유로화의 약세를 위한 ECB의 재정정책 협조가 절실하다. 덧붙여 유로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들의 국제적 공조도 필요하다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자료: Bruegel (2012, 8.), Intra-Euro rebalancing is inevitable, but insufficient.) ★

이서영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 제15회 브뤼셀 포럼 The 15<sup>th</sup> Brussel Forum

The 15<sup>th</sup> Brussels Forum on “EU and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Agendas and Future outlook” took place at Yonsei University’s New Millenium Hall #701 on October 11th. The forum invited six scholars to present on the long term implications of EU’s economic interests in East Asia and the viability of competing proposals for regional integration. In the first session moderated by Prof. Park Young-Ryeol, Director of the Yonsei-SERI EU Centre, Prof. Vladimir Hlasny (Ewha Woman’s University) presented on the topic of “Evaluating the EU-Korea FTA : One year on.” The second presentation was given by Dr. Kang Yoo-Duk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who presented on the topic of “The EU-Korea FTA: How does it affect EU’s FTAs with other East Asian Countries.” Dr. Maria Garcia’s (University of Canterbury) third presentation on topic of “Competitive Fear: the EU, USA and the free trade agreement in East Asia” examined the political goals behind competition and trade liberalisation. In the second session, moderated by Dr. Daniel Novotny, director of Global Europe, Prof. Lee Moo-Sung (Myongji University) first presented on “The case for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role of local governments”. The second presentation was given by Prof. Chistopher Napoli (University of Nottingham, Malaysia), on “China and changing tides in ASEAN trade.” The third presentation was given by Prof. Kim Phil-Soo and Prof. Park Young-Ryeol on “The impact of institutional quality and differences on EU cross-border acquisitions in Northeast Asia.”

2012년 10월 11일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701호에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어젠다와 그 미래”를 주제로 브뤼셀 포럼이 진행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6명의 학자가 초청되어 유럽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적 관심과 지역통합 가능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1부는 박영렬 연세-SERI EU센터 소장이 진행하였다. 블라디미르 흘라스니 교수(이화여자대학교)가 “한-EU FTA, 지난 1년의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강유덕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한-EU FTA는 EU와 동아시아 국가의 FTA 체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마리아 가르시아 박사(캔터베리 대학교)는 “심화된 경쟁: EU,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FTA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2부 진행은 다니엘 노보트리 박사(글로벌 유럽)가 맡았다. 이무성 교수(명지대학교)가 “북동아시아의 지역통합 사례: 지역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크리스토퍼 나폴리 교수(노팅엄 대학교)는 “아세안 무역의 변화물결과 중국”, 김필수 교수(대림 대학교)와 박영렬 교수(연세대학교)는 “북동아시아에서 EU의 해외 인수합병의 차이점과 제도의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제43회 EU 특별강연 The 43<sup>rd</sup> EU Special Lecture

On August 13<sup>th</sup>, 2012, the 43<sup>rd</sup> EU special lecture was held in Jang Ki-Won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at Yonsei University with Dr. Guy Sorman, a French economist and philosopher. The topic of the lecture was “What Koreans can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the European Union”. Dr. Guy Sorman highlighted the European Union’s successes and the failures and proposed lessons for Korea. He said that European integration created an atmosphere in which citizens can no longer imagine going to war with their neighbours. He pointed out that as the European Union has also brought trade and open border, poor countries receives support from the wealthier members. Also, he discussed the crisis of welfare state. He said the current crisis is not just of economy and finance, but on that seems to threaten the welfare system. Therefore, Korea can learn important lessons from European Union’s experience regarding welfare policies.

9월 13일, 연세대학교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기 소르망(Guy Sorman)교수의 특별강연이 열렸다. 이번 강연은 “한국인이 EU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유럽이 통합으로 얻은 이익을 분석했다. 기 소르망은 경제통합으로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지역분쟁이나 전쟁 위험이 감소한 것을 EU가 거둔 가장 큰 이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EU 내 상품과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가난한 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이 유럽의 경험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복지국가의 위기’를 꼽았다. 최근 몇몇 유럽 국가들의 국가채무 불이행 위기가 바로 복지국가의 위기라며, 한국은 이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르망 교수는 유럽 각국의 위기 대처 방식은 한국에도 교훈을 준다면 급격한 변화보다는 지속성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며 강연을 마쳤다.





## 제44회 EU 특별강연 The 44<sup>th</sup> EU Special Lecture

On October 12<sup>th</sup>, 2012, the 44<sup>th</sup> special lecture by Jean-Pierre Raffarin, former prime minister of France, took place at Yonsei University Changkiwon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on the topic of "A new world after the crisis : a French viewpoint". Former minister Raffarin gave his view on the future of Europe. As Europe has agreed on a new growth pact and fiscal responsibility and the ECB has promised more measures to stabilise the market and monitor the fiscal spendings of member states, he forecasted that Europe will undoubtedly recover, and return to economic growth. He then moved on to predict the world after the crisis. He said that the economic links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nations is expected to strengthen. Also, he emphasised that nations must not turn to protectionism and nationalism.

2012년 10월 10일, 연세대학교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제44회 EU 특별강연이 열렸다. 장피에르 라파랭 전 프랑스 총리가 "경제위기 이후의 세계: 프랑스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라파랭 전 총리는 유럽 재정위기가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하였고, 유럽에서는 새로운 성장조약과 재정적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은 더 많은 개입을 약속하였고, 재정규율을 강화하여 각 국가의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유럽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위기 이후의 세계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단절이 없어지고, 연결고리가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는 보호주의와 민족주의를 배제해야 하지만 개방과 보호의 균형을 적절히 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 제45회 EU 특별강연 The 45<sup>th</sup> EU Special Lecture

On October 11<sup>th</sup>, 2012, the 45<sup>th</sup> EU Special Lecture by CEO of Reddal, Mr. Per Stenius, took place at Yonsei University Daewoo Hall #B120. In his lecture, Mr. Stenius gave a talk on "Capturing market opportunities in Northeast Asia and Europe." In the lecture, he showed how European companies were expanding their business in Northeast Asia. For those companies, according to him, Korea is regarded as a hub in Northeast Asia with important trade ties and an increasingly large talent pool. Then, he explained that the Korea-EU FTA has had highly positive effects for the Korean economy and European businesses alike. The agreement was an important incentive for both Reddal's decision and European companies in entering the Korean market, which significantly eased conducting business in Korea.

2012년 10월 11일, 연세대학교 대우관 지하 120호에서 제45회 EU 특별강연이 열렸다. 레달(Reddal)의 CEO인 퍼 스티니우스는 "북동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시장기회"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현재 많은 유럽 기업들이 북동아시아로 진출하고 있는데, 그중 한국은 거대한 인재 시장으로 여겨지며 북동아시아의 무역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EU FTA가 한국경제와 유럽경제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유럽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 제16회 EU Core-Circle Society 세미나 The 16<sup>th</sup> EU Core-Circle Society Seminar

On August 9<sup>th</sup>, the 16<sup>th</sup> EU Core Circle Society Seminar was held a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Mr. Park Jin-ho(Bank of Korea) led the seminar under the title "EMU Crisis and Germany and France's Policy Suggestions". The participants discussed on possible political solutions for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and the collaboration history of Germany and France.

9월 13일 목요일 삼성경제연구소 510호 회의실에서 제16회 EU Core-Circle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EMU 체제위기와 독일 및 프랑스의 정책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진호 차장(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이 발표하였다. 유로존 국가채무위기의 해결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적 사고, 통화통합 공조 역사 등을 토대로 향후 정책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2012 EU 아카데미 가을학기 개강 2012 EU Academy Fall Semester

On September 8<sup>th</sup>, 2012, the 3<sup>rd</sup> EU Academy Programme began its 2012 Fall semester course. The EU Academy programme invites students from diverse academic fields and different universities in Korea. A total of 56 students will be participating in the EU Academy course this semester. The first lecture of the semester on the history of the EU's development was given by Prof. Lee Yeon-Ho,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Yonsei University and Vice-director of the Yonsei-SERI EU Centre. The second lecture on European market access was given by Prof. Park Young-Ryeol, professor of business at Yonsei university and director of the Yonsei-SERI EU Centre.

2012 EU 아카데미 가을학기(EU Academy 3기)가 9월 8일 개강하였다. 2012 EU 아카데미 가을학기는 다양한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며, 금번 학기 개강 인원은 56명이다. 첫 개강 후 1교시는 이연호 교수(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세-SERI EU Centre 부소장)가 EU의 역사에 관하여 강의하였으며, 2교시에는 박영렬 교수(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연세-SERI EU Centre 소장)가 유럽시장 진출 전략에 관하여 강의를 하였다.

